

공 개



의안번호	제 248 호 (2021년)	의 결 사 향
의 결 연 월 일	2022. 3. 10. (제 5 차)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2. 3. 10.

1. 의결주문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제31기(2016.1.1.~2016.12.31.)부터 제33기(2018.1.1.~2018.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제31기(2016.1.1.~2016.12.31.)부터 제33기(2018.1.1.~2018.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 등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별도 '16년 : 6,280백만원, 연결 '16년 : 2,600백만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식 미기재 [별도 '16년 : 34,364백만원, '17년 : 7,710백만원, '18년 : 24,794백만원, 연결 '16년 : 4,660백만원, '17년 : 14,729백만원, '18년 : 24,794백만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식 미기재 [연결 '16년 : 24,094백만원, '17년 : 500백만원]○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조치 내용 *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발행제한 6월*5○ 과징금(前 대표이사 000 10백만원)*6○ 과태료(회사 72백만원)*7○ 감사인 지정 2년*8

※ 前 담당임원 000('18.3.30. 퇴직)은 '해임권고' 대상이나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자위법사실 통지'로 갈음('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중요도 중 중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치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중과실

-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 III.2.가.2)]

나.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 과실

-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가.3)]

다.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식 미기재 : 과실(연결재무제표에만 해당되므로 최종조치안 미반영)

-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가.3)]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기본조치의 가중 : 1단계 가중

-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가중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4)]

○ 기본조치의 감경 : 1단계 감경

- 회사가 최초로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19.4.18.)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19.5.17.)한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감경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2)]

- *4 조치근거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항, 「舊 외감규정」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 *5 회사의 상장폐지('21.10.8.)로 과징금 부과에 갈음하여 증권발행제한 조치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가.(1)(나)]
- *6 회사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나 대표이사는 과징금 면제근거가 없어 과징금 부과
 - 자본시장법 과징금 : 前 대표이사 000 10백만원, 산출근거 (붙임2) 참조
 -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1호 및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7 과태료 산정내역 : 72백만원 (붙임3) 참조
 -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3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8 조치근거 : 「舊 외부감사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외부감사법」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1)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p>지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별도 : 6,280백만원, ’16년 연결 : 2,600백만원] ○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별도 ’16년 : 34,364백만원, ’17년 : 7,710백만원, 연결 ’16년 : 4,660백만원, ’17년 : 14,729백만원] ○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연결 ’16년 : 24,094백만원, ’17년 : 500백만원]
<p>조치 내용 *1,*2,*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 [중과실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65.4백만원^{*5}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40점 ○ 공인회계사 OOO [중과실 III] (제31기 담당이사,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공인회계사 OOO [과실 IV] (제32기 담당이사,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공인회계사 OOO [중과실 IV] (제31기 및 제32기,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1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3)]

나.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나.4)]

다.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 과실(연결재무제표에만 해당되므로 최종조치안 미반영)

-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나.4)]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1단계 감경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1단계 감경

- 회사가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감리착수일 후 회사가 최초로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은 날('19.4.18.)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공시('19.5.17.)하도록 감사인이 적극 조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감경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3.나.4)]

○ 공인회계사 000은 보조책임자로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1단계 추가 감경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4 조치근거

- ○○회계법인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1항
- 공인회계사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제1항

*5 과징금 산출근거 (붙임2) 참조

- 자본시장법 과징금 : 65.4백만원
 -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1호 및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2)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별도 '18년 : 24,794백만원, 연결 '18년 : 24,794백만원]
<p>조치 내용 *1,*2,*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 [과실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30점 ○ 공인회계사 ○○○ [과실 I] (제33기 담당이사,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공인회계사 ○○○ [과실 II] (제33기,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1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 수준보다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

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하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공인회계사 000은 보조책임자로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4 조치근거

- 00회계법인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1항,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공인회계사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제1항,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4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4항

4. 참고사항

가. 제13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1. 10. 28.)

나. 관계법규(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 등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 000 000 00, 0000 00

□ 000[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前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0.
- 주소 : 000 000 000 000000 00-00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부칙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 발행을 조치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 (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前 대표이사 000에 과징금 10,000,000원을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에 과태료 72,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규정 등에 의하여

○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는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 및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이하 ‘회사’)는 제31기(‘16.1.1.~’16.12.31.)부터 제33기(‘18.1.1.~’18.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16년 별도 : 6,280백만원, ‘16년 연결 : 2,600백만원]

- 회사는 상장 종속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회계단위로 보고 영업권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를 위해 선택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사용 및 공정가치 측정 시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 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 회사가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20%)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2,600백만원, 별도 재무제표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6,280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별도 '16년 : 34,364백만원, '17년 : 7,710백만원, '18년 : 24,794백만원,
연결 '16년 : 4,660백만원, '17년 : 14,729백만원, '18년 : 24,794백만원]

- 회사는 대표이사,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등과 매출·매입, 자금거래 등이 존재 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주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식 미기재

[연결 '16년 : 24,094백만원, '17년 : 500백만원]

- 회사는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함에도 해당 수익금액 등을 연결재무제표 주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11.27.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31기의 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내용

(단위 : 백만원)

신고서 제출일	공시서류	모집증권	모집금액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2018.11.27.	증권신고서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5,455	제31기 재무제표

○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17.10.24. 및 '19.4.4.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제31기부터 제33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내용

(단위 : 백만원)

공시일자	공시서류	모집증권	모집금액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2017.10.24.	소액공모 공시서류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999	제31기 재무제표
2019. 4. 4.	소액공모 공시서류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999	제31기 재무제표 제32기 재무제표 제33기 재무제표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제2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규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름.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59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175조, 제379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여부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1
 -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04 등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문단 34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 69 등

-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 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및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제31기 및 제32기 감사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 0000 000

☐ 000 [제31기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 000 0000 000

☐ 000 [제32기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 000 0000 000

☐ 000 [제31기 및 제32기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 0. 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 000 0000 000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 규정 등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65,4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6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3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며,

○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2023회계연도('23.1.1.~'23.12.31.)부터 2024회계연도('24.1.1.~'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4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2023회계연도('23.1.1.~ '23.12.31.)부터 2024회계연도('24.1.1.~'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2023회계연도('23.1.1.~'23.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이하 '회사')의 제31기('16.1.1.~'16.12.31.)부터 제32기('17.1.1.~'17.12.31.)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별도 : 6,280백만원, '16년 연결 : 2,600백만원]
- 회사가 상장 종속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회계단위로 보고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를 위해 선택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하고,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며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
- 회사가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하였고, 관련주석에 사용가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을 회사에 먼저 제시하고, 손상 및 공정가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별도 '16년 : 34,364백만원, '17년 : 7,710백만원, 연결 '16년 : 4,660백만원, '17년 : 14,729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매입,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음에도
- 특수관계자거래가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연결 '16년 : 24,094백만원, '17년 : 5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단일외부고객에 대한 수익이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였으나
- 영업부문 공시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하고,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르되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별지3)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제33기 감사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16 4층

☐ 000 [제33기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 000 0000 000, 00

☐ 000 [제33기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 0. 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000 00-00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8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3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며,
-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2023회계연도('23.1.1.~'23.12.31.)부터 2024회계연도('24.1.1.~'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3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2023회계연도('23.1.1.~ '23.12.31.)부터 2024회계연도('24.1.1.~'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2023회계연도('23.1.1.~ '23.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이하 '회사')의 제33기('18.1.1.~'18.12.31.)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별도 '18년 : 24,794백만원, 연결 '18년 : 24,794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매입,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음에도
- 특수관계자거래가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하고,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르되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붙임)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2. <생 략>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 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삭 제>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 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 <생략>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4. (생략)

② (생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⑦ <생 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 8.~20. <생 략>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4조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다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5. <생략>

③~⑦ <생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심사하는 업무

2.~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21. <생략>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⑥ <생 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 <생 략>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생 략>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 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 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생 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삭 제>
-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⑤~⑥ <삭 제>

제60조(사전통지)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0조의2(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61조(조치의 고지)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탁)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5. (생략)
 6.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감리실시 검토 등 감리업무 집행
 7. 제51조에 따른 조사업무 집행
 8. 제59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9. 제64조에 따른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와 사후관리 집행
 10.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접수
 11.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 보고수리 및 조치안 작성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관련 자료요청
 12. (생략)
- ② 삭제
- ③~④ (생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들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 략>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 등의 고발등, 금융위원회 등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16.7.18. 시행)

-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③ 증선위 조치안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 <생략>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
- 4)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5) 위법행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따른 이행조건 또는 계약조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6)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폐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7)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 2)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2. 중과실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
- 2)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
- 2)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 등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과실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 1)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원칙(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
- 2)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 1) 양적 및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 2)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회사에 대하여 과실사유 가.1) 또는 가.2)를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4)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IV.~V. <생 략>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생 략>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3) <생 략>

4)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6) <생 략>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5) <생 략>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생 략>

2) 규정 제48조 제1항 또는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감리착수일 후 회사가 최초로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금융회사는 검사착수후부터 검사지적일(확인서 요구일)까지 1)의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생 략>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3) <생 략>

4) 회사가 VI.3.가.2)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7) <생 략>

VII.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생 략>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VIII.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 <생략>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 1)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3)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다)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2)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2)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IV.~V. <생 략>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6) <생 략>
- 7)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9) <생 략>

나.~다. <생 략>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나. <생 략>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나. <생 략>

VII.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마. <생 략>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VIII.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5. <생략>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의2. <생 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③~⑦ <생 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 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 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 <삭 제>

13.~35. <생 략>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49.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생 략>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마.~자. <생 략>

②~④ <생 략>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생 략>

②~⑤ <생 략>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② <생 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④~⑥ <생 략>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178조의2 제1항의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라. <생 략>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다. <생 략>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라. <생 략>

③~⑥ <생 략>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다. <생략>
- 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④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푸.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6,000만원

□ **舊「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3.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 2.~5. <생략>
- ②~③ <생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 1.~3. <생략>

부칙 <제2020-4호, 2020. 1. 16.>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생 략>

다.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상기 라. 및 마.에 불구하고, 법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의한 것으로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단체는 제외)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동일 사업연도 중 2 이상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정기보고서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6. 최저부과액

위반행위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생략>

- 다. 위의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은 이 기준 2.라.에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의 증권신고서 위반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과징금'으로 적용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의2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략>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③ ~ ⑫ <생략>

- 제2-1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137조 제1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미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 ② ~ ④ <생략>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 가) 생략
-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 (2) 공시위반법인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실질적인 교체 후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회생과정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바를 감안하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다) 주요 채권금융기관(개인 제외)의 차입금 상환유예 등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3) ~ (4) <생략>
- 나.~다. <생략>
-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⑥ <생략>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나. <생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바.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 략>

4. ~ 6. <생 략>

□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01.3.28,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1)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가)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나)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다)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2)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가)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다)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라)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마)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바) 기업이 (1)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사) (1)의 (가)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아)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자녀 및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2) 배우자의 자녀
- (3)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18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문단 17의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거래 금액
- (2)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가)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나)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 (2)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 (3)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 (4) 리스
- (5) 연구개발의 이전
- (6)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 (7)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 (8)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 (9) 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약정(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미이행계약을 포함)
- (10)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4 이 기준서는 다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한 종속기업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정의한 관계기업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한 공동기업
- 그 밖의 금융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참조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90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창출단위와 배분된 영업권은 손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04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 (1)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 (2) 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 4 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 69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문단 11 과 12 참조)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지분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13과 14 참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지배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배력 할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특히, 문단 8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 요소)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 76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 77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 78 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 1의 주안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판단하는 데 있다.
- (1)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
 - (2)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 79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수준 1의 투입변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량의 비슷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예: 채무 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측정일에 각각의 개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정방법(예: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2)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3) 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는 동일한 항목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항목이나 자산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문단 39 참조).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80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일일 정상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BC158 따라서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에서 할증과 할인의 적용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과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IFRS 13은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에서 할증이나 할인을 고려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은 그러한 할증이나 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문단 BC168은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다면 조정 없이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IASB의 근거를 설명한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할증이나 할인의 적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IFRS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168 수준 1의 투입변수는 동일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조정하지 않은 공시 가격이다. IASB는 그러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구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표시)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 (1)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 (2)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조사, 관찰, 확인요청,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A18. 외부확인 은 문서나 전자 형태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에 의해, 제3자(확인당사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입수되는 감사증거를 나타낸다. 외부 확인절차는 일반적으로 특정 계정잔액 및 그 구성요소와 관련된 경영진주장을 다룰 때 유용하다. 그러나 외부확인이 계정잔액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어떤 기업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확인요청은 계약에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정이 있다면 관련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확인 절차는 예를 들어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없다는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하 생략)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평가함.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명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 회계감사기준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11.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b) 미수정왜곡 표시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c) 문단 12~15에서 요구하는 평가

12.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인 측면(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a)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b)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치하며 또한 적합한지 여부

(c)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

(d)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 가능한지 여부

(e)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의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는 적절한지 여부

(f) 재무제표에 사용된 용어

14.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2와 13의 요구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
 - (b) 전체재무제표(관련 주식 포함)는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에 대해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1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731